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73
----------	-------

발의연월일 : 2025. 4. 28.

발 의 자 : 이용우 · 신장식 · 박지혜
전진숙 · 박홍배 · 이학영
장철민 · 임오경 · 한창민
정혜경 · 전종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2024년 연간 총 임금채불이 역대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24년에 채불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정부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액도 7,272억 원에 달하였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간 대지급금 지급분 대비 환수분은 2019년 24.8%에서 2024년 21.8%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이 기금지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도 2019년 - 307억원에서 2024년 - 1732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총 적립금은 2019년 9587억원에서 2024년 3472억으로 감소).

채불피해근로자를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강화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필수적임.

이에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채불임금

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하수급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가 체불임금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대상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산목록 제출명령 및 과세자료 확인, 사회보험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등).

나.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대지급금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되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그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부칙 제3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를”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의2까지, 제12조·제13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

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연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제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 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 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 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 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 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u>사업주를</u> 대신 하여 지급한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 급금의 지급) ① ----- ----- ----- ----- ----- ----- ----- ----- ----- ----- ----- <u>사업주(「근로 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 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 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의2까지, 제12 조·제13조 및 제22조부터 제25 조까지에서 같다)를 ---.</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설>		<u>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 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 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 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u>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연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